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개선

수도권·광역시를 포함하여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부서 | 경기도 관광산업과 ☎ 031-8008-3335

개선배경



- 2024년도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내 관광기반 확충방안으로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권한이양 발표함(2024.1.4.)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안) 〉

- 지정기준 : (기존) 50만㎡ 이상 → (신설) 5만㎡ 이상 30만㎡ 미만
 - 필수시설 : (기존) 3종 이상(편의, 숙박, 운동·위락 등) → (신설) 2종 이상(편의, 관광숙박시설)
 - 권한이양 : 시·도지사(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 (신설) 시장·군수(지정 전 시·도지사 사전협의)
 - 혜택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발표(2024.1.4.)
 - 가평군·연천군은 각종 접경, 군사, 상수원 규제 등 중첩규제로 낙후되어 있음
 - * 지역낙후도지수 전국 순위 : 가평 114, 연천 106(전국 167개 시군, '20.10./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 **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내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포함('21.10.19.)
 - 가평·연천 지역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라 제외하는 것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배치되는 정책으로
 -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인* 배제가 계속 될 경우 가평, 연천은 희생기회 영구 상실 우려
 - * 부처별 배제사업 : (국토부)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7개부처 통합)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공모, (기재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산자부)기회발전특구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정 이유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제정
- 제정/시행 : '22.6.10.제정 / '23.1.1. 시행
- 주요 내용 : 국가 등의 책무 규정, 행재정적 지원 및 규제특례 우선 적용

☞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되도록 개선 건의하여 가평군과 연천군을 포함한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적용 가능

* (문체부 신설 안) 수도권·광역시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 (개선안) 인구감소지역 전체

개선내용



개선 전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생략)
〈신설〉

〈신설〉

개선 후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신설 2024. 10. 22〉
※ 이외 관련 조항 생략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려던 것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개선을 건의하여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해짐

추진과정



- ('24.2.22.) 인구소멸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관련 개선 건의(道)
- ('24.2.22.)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관련 개선 건의(道→문체부)
- ('24.2.22.) 공동 대응을 위한 건의 자료 공유(道→인천광역시)
- ('24.3.27.)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 장관 주재 건의(道→행정안전부)
- ('24.3.29.) 관광자원개발사업 현안 점검회의문체부-시도 국장급
- ('24.7.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문체부→道)
- ('24.9.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25.4.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시행

개선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생활인구* 증대 및 관광 활성화
- *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